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규제완화 요구에 따른
안전규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for The
Request of The Deregul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ial Structure

육동일
충남대학교

요약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개혁은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그 집행방식 등을 완화하고 단순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개발·발굴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명확한 규제원칙과 규제개혁 전략, 그리고 강력한 안전규제관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규제완화요구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합리화, 효율화, 민주화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민영화 사례, 규제순응 사례, 그리고 정부와 NGO간의 바람직한 관계들에 대한 외국과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규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지침 승인절차 변경에 따른 방사선이용 및
품질보증검사에 관한 안전규제지침 개발방향
Development Approach on Usage of Radiation and Inspection of QA According
to the Change of Approval Procedure of Safety Regulatory Guides

오병주, 안형준, 김상원, 유선오, 강석철, 양성호, 한승재, 김홍석,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요약

2001년도에 원자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자력법관련 수탁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규제전문기관에서는 그동안 원자력안전규제검사에서 기술기준의 세부적 이행사항으로 안전규제지침을 개발하여 내부분서로 활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규제지침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기기 생산 품질보증검사이침,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에 관한 안전검사이침 및 방사성폐기물선량판독 심·검사이침서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